

정부 3.0 지방 차원의 구현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행복한 변화**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충남**

2013. 6. 19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순서

I

충청남도의 여건과 과제

II

정보공개 100%로 투명한 도정

III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IV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민·관 협치 강화

V

협업을 통한 일 잘하는 충청남도

VI

지방 차원의 정부 3.0 모델 - 3농 혁신



충청남도의 여건과 과제



대한민국 서해안시대의 출발점

- 2012년 12월, 홍성·예산 일원의 내포신도시로 이전 완료
-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2013년,
'충남의 새로운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아시아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 충청남도

풀어가야 할 과제

- 국민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참여하도록 정보공개 확대
-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창출
- 기관·부서간 칸막이 해소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



“국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행정” “함께 해서 더 일 잘하는 충청남도”

II 정보공개 100%로 투명한 도정 (1)



과거

- 국민의 청구에 의한 수동적 · 소극적 공개
- 국민의 공개 요구는 지속 증가
 - 정보공개 청구 현황
(‘08년) 290건 → (‘12년) 503건
※ 73% 증가
 - 부분공개 및 비공개 비율 15% (‘12년)



앞으로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공개
➡ 100% 열린 도정 구현
- **제로(ZERO)-100 프로젝트**
 - 정보공개 100%, 업무누수 0%를 지향하는 충청남도 고유의 새로운 정보공개 모델
 - 대외적으로는 행정정보 전면 공개, 대내적으로는 업무의 공유와 개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협업 촉진
- 안전, 복지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보를 공개 청구 전에 선제적으로 공개
(‘12년) 58종 → (‘13년) 217종
➡ (‘14년) 전자문서 원문 공개

[주요 공개정보사례]

- 치매병원 및 치매지원사업상담센터 현황 공개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복지 향상
- 도내 재해위험지구 위험구역현황 공개로 안전한 주민생활 지원

II 정보공개 100%로 투명한 도정 (2)



1 주요정책정보 및 성과지표 공개

- 과거 : 주요정책지표 설정에서 주민 참여 미흡

- 이제는 : 정책수혜자인 도민이 직접 참여

[사례] '13년 도민과의 약속

- 역점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목표 설정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 ('13.2.18. 직무성과계약 체결)
- 수혜자 관점의 의견, 성과목표 조정 등 적극 참여
➡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야별 정책목표 설정
- 도민 참여형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전면 공개



2 도 살림살이 100% 전면 공개

- 과거 : 예산서, 결산서 등을 포괄적으로 공개

- 예산낭비사례, 대규모 투자사업 등 구체적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 불가

- 이제는 : 세입·세출 등 모든 재정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 ('13.6.17.)

- 일자별 예산 현액, 총수입, 총지출, 자금잔액 등
- 결산, 계약현황, 학술용역현황 등 전면 공개

- 기대효과

국민은 '클릭' 한번으로 도 예산 내역부터 자금 잔액까지 한 눈에 확인 가능

- ➡ 낭비성 예산집행, 불필요한 지출 등을 도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도민에게 신뢰 받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1

민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개방 ('13년)

- [현재] 보유 중인 216개 시스템, 472개 DB 중 66개 DB 개방
- [앞으로] '17년 까지 314개 DB 개방

('13) 80건 → ('14) 117건 → ('15) 81건 → ('16) 29건 → ('17) 7건

※ 개인정보 DB등 법정 비공개 8대 항목 158개 DB는 개방대상에서 제외

2

창업아이템·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우선 개방

- [예시 1] '백제' 브랜드 출원상표(업무표장 등 7건) 공개를 통해
공예·의류·공연 산업 부가가치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예시 2] 농업연구결과 DB공개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IV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민·관 협치 강화



1 도와 시·군의 조화와 협력

-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 협력적 기능 모색

- 시군은 주민과의 접점에서,
도는 광역행정의 기획자 및 시군의 조력자로서
주민의 행복을 위한 도정 구현

➡ 도정과 시·군정 코디네이션 강화

- 도지사와 읍면동 직원까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메신저 시스템 구축 : **CN-Talk**

[사례] 2012년, 104년만의 가뭄을 겪으며 읍면동장,
직원들과 **CN-Talk**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현장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

2 산하기관과 → 갑·을 관계 청산

- 산하기관 : '13년 부터 '공공기관' 으로 명칭 통일
- 도정의 파트너로서 상징적 의미로 통칭을 변경
- 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책임성 담보
➡ 공공기관 재정, 고객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도민에게 공개

3 주민자치아카데미

-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을 자원조사
- 풀뿌리 시민단체 등 4,185개 단체·시설 ('13.1.~5월)
➡ 공동체간 소통 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 주민참여 욕구 증가에 맞춰 주민들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아카데미 개설
- 목표 : '13~'15년 까지 5,000명 교육
- 운영 : 사랑방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및 마을사업 역량 강화



■ 삽교호 수질관리 사례와 물 통합 관리

1 삽교호 현황

- 유역 : 충남도 및 세종시 ('79년 준공)
- 축산·생활·산업폐수 등 다양한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로 농업용수로서의 기능 한계
 - 국민의 먹거리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차질

2 그동안 추진현황

-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한 기본조사('99년, 농어촌공사)
- 수질개선사업 보완조사('08~'09, 농어촌공사)
- 사업비 과다로 기본계획 미확정 (농림축산식품부)

3 문제점: 이해 상충과 분절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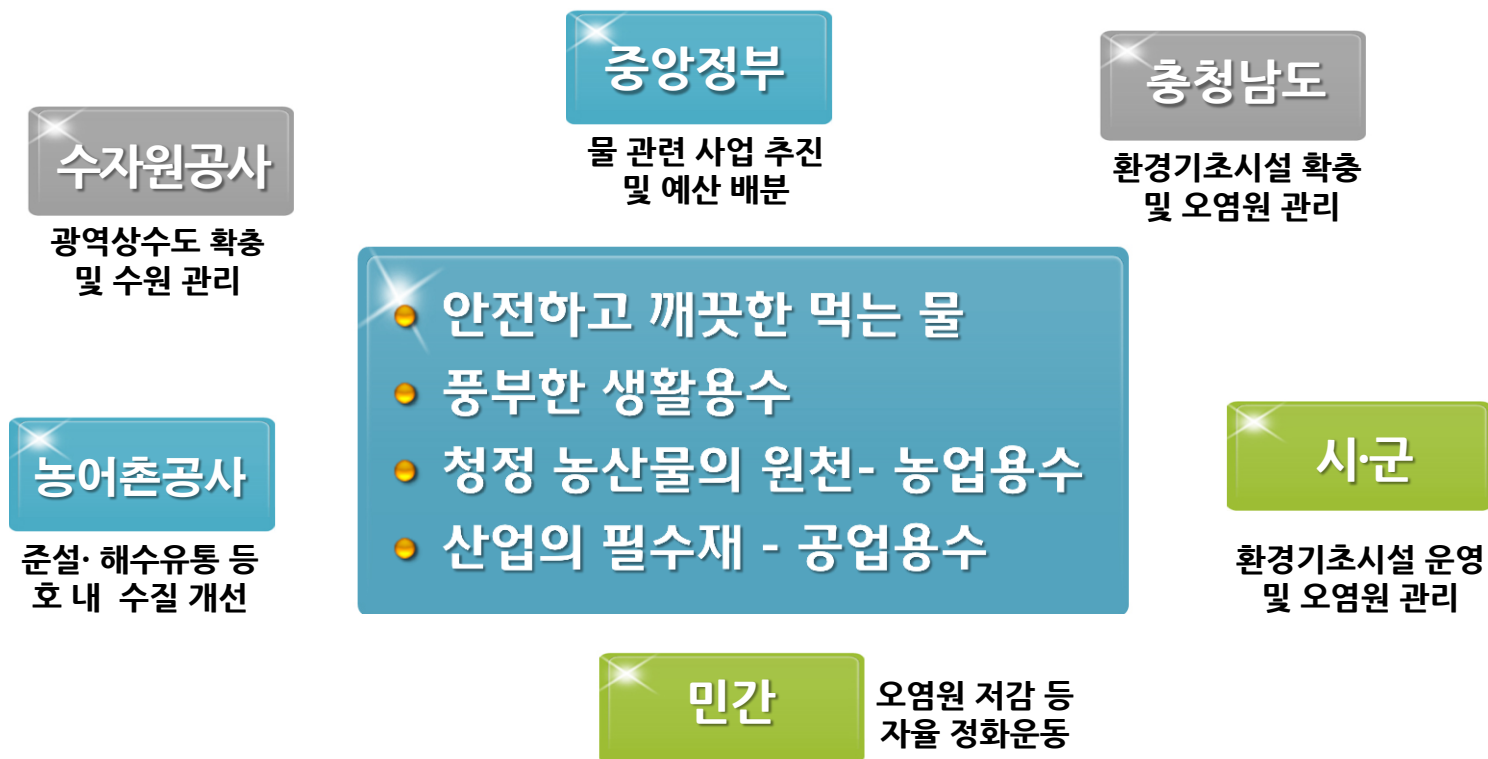
- 상류 대책 - 환경부, 시·군
 - [기능] 농어촌 하수도, 축산폐수 등 처리시설 건설·지원 및 관련 예산 배분, 오염원 지도 단속 등
 - [입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대규모 예산 확보 및 오염원 지도단속 등 어려움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
- 호 내 수질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 [기능]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추진 및 관련 예산 배분
 - [입장] 상류 오염원 관리대책이 선행되어야 효율적인 수질 관리 가능 → 즉각적인 상류대책 필요
- 오염원 - 민간(국민, 산업시설 등)
 - 인식 부족, 오폐수 처리비용 문제 등으로 소극적 대응

각 기관간 상충하는 이해와 분절된 기능을 어떻게 통합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협업 모델: 물 통합 관리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통의 목표를 찾아 자원과 기능을 함께 활용하며 맑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협의회 구성, '12년)



도-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간 협업: ('12년) 8개→('13년) 12개→('14년) 20개 과제 등 지속 확대



농어촌이 잘 살아야 선진국! - 3농 혁신의 출발

-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농어업의 위기
 - 기존 정부 주도형 농정, 보조금 지원방식을 벗어나 농어민의, 농어민에 의한 농정 혁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3농 혁신 추진경위

2011년 소통과 공감, 참여에 의한 계획수립

- 추진계획 충남도민에 보고 및 권역별 설명회
- 전담추진체계 구축(3농혁신위, 3단/8TF팀)

2012년 현장 속으로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토론
- 3농혁신대학 운영(매월)

2013년 융복합·협력을 통해 성과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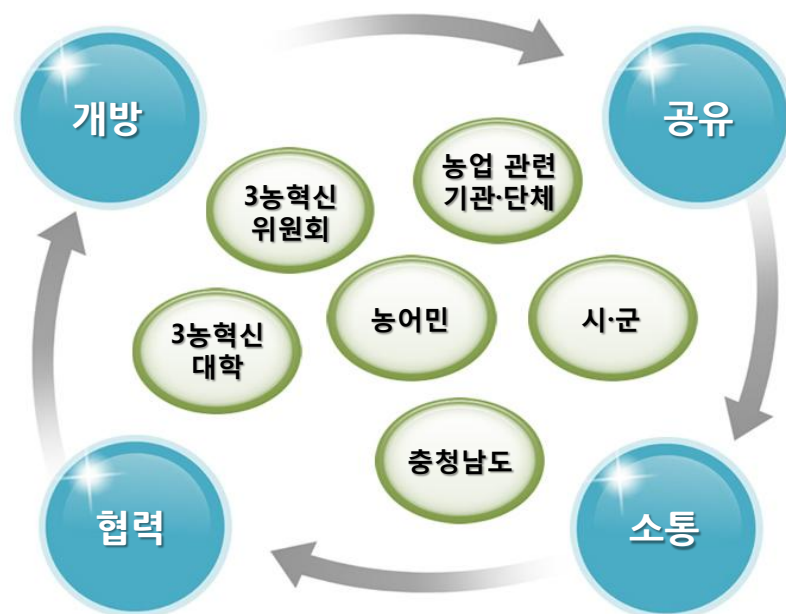
- 추진체계 재정비(3농혁신위, 5단/18TF팀)
- 농어업인 전진대회 개최(2.15)

민간 주도의 3농혁신 확산 및 현장실천력 강화 중점



3농 혁신의 동력 - 민·관 거버넌스

- 농어민과 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협업을 통해 지원
- 농어업 관련 정책과 사업을 모두 공개·공유,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토론하면서 3농혁신 방향을 결정하고 실천
 - 3농혁신위원회, 3농혁신대학, 홈페이지 등



지방자치 - 유능한 정부를 향한 약속

지방자치는 21세기 창조경제의 토대이며 국가 발전 전략

지방정부의 실험정신은 국가혁신의 초석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